

현재 노인과 미래 노인의 불평등 추이에 관한 연구: 코호트별 소득과 자산을 중심으로*

최승훈** · 민수빈*** · 이예인****

요약

본 논문은 노인에 대해 접근하는 현 시대의 획일화된 방식에 대해 비판하고, 노인의 다양성과 코호트 간 이질성을 바탕으로 현재 및 미래 노인을 출생년도에 따라 세 코호트로 구분해 이들의 소득과 자산 불평등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9년 금융위기 이후 조사대상의 소득 및 자산 점유율과 10분위분배율 분석 결과 베이비붐 이전 두 세대에서는 중간계층(5-8분위)의 점유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일제강점기 세대의 분배율은 다른 두 세대에 비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적인 분배율이 양호한 형태를 취해 코호트 간 결과의 차이를 나타냈다. 둘째, 지니계수를 활용한 소득불평등 탐색 결과 베이비붐 세대는 노년기에 진입할수록 불평등의 개선을 보였으나 이전 두 코호트에서 누적불평등 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일제강점기 세대의 가구소득 불평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앳킨슨 지수를 활용한 소득 및 자산 불평등 탐색 결과 베이비붐 이전 세대 모두 불평등에 대한 정적인 연령효과가 나타나 누적적인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자산 불평등 수준의 경우 모든 코호트에서 소득 불평등 수준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세대 간 불평등의 양상과 수준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 코호트 각각에 표적화된 정책을 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노인집단을 코호트로 구분하여 불평등 추이를 분석하여 개별 코호트의 특성을 도출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각각의 정책적 접근을 모색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노인 불평등, 노인 코호트, 앳킨슨 지수,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

* 본 논문은 2019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BK21플러스 사업(신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글로벌 창의 융합 사회복지 인재 양성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 제1저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perlsoup33@gmail.com)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sbi1030@yonsei.ac.kr)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2019540045@yonsei.ac.kr)

1. 서론

인구 고령화는 현대 사회의 대부분 국가에서 경험하고 있는 현상으로,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국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초고령 사회¹⁾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배성우 외, 2008; 홍석철·전한경, 2013). 이는 단순히 고령 인구의 절대적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인구의 감소, 자본축적 속도의 둔화 그리고 복지재정의 급증 등 사회 전반의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노인 불평등 역시 이들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김복순, 2016). 2000년대 이후 경제지표가 외환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 데 반해 사회적 분배를 나타내는 불평등 지표들은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2009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의 발전된 복지 국가들은 공적 연금을 통하여 노인집단의 소득보장과 빈곤 및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반해(Pedersen, 2004),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보장 제도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제도의 역사가 짧아 적절한 노후소득원으로써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루어졌던 가족 중심의 사적 이전의 구조는 산업사회와 핵가족 제도의 영향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노인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는 다소 심각한 상황이다(김수영 외, 2009).

그간 정부는 인구 고령화 대응책의 표적 집단으로 65세 이상의 인구를 단일한 노인집단으로 상정하여 이들에 대해 획일적인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노인의 특성에 대해 더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가령, 욕구의 다양성에서부터 출생연도에 따른 연령집단 간 이질적 경험, 그리고 제도 수혜 경험의 차이 등 노인이라는 동일한 정책집단 내에 존재하더라도 개별 노인의 특성과 정책적 욕구가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 절대적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정경희, 2016).²⁾ 현재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개별 정책은 주로 신체적 노화로 인한 건강 문제, 은퇴 후 소득감소에 대한 보장 등 생애 과정에서 노인이라면 응당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는 것을 정책적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노인

1)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2025년경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된다(통계청, 2019)

2)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집단 내 연령구성 역시 변화하는데, 2000년에는 65~69세에 해당하는 연소노인이 전체의 40.7%로 노인집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에 비해 2015년에는 32.0%로 감소하였다. 반면 80세 이상의 경우 2000년 14.2%에서 2015년 21.3%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22.4%까지 증가할 전망이다(정경희, 2016).

정책에 대한 현재의 일률적 접근방식은 노인집단의 정책적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며 이는 고령화 흐름이 강화될수록 그 한계가 명백해질 것이다.

현재 노후소득보장의 불평등 완화와 소득재분배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역시 정책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데, 각 세대 내 형평성 문제와 급여의 적절성 문제가 대표적이다. 현 노인 세대의 경우 주된 근로활동 시기에 제도가 부재하였거나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노인 세대로 유입되는 베이비붐 세대는 두 번의 경제 위기로 인한 고용불안정성의 상승으로 동일 코호트 내에서도 공적 연금의 가입률 격차가 매우 크다. 그 결과 현재 전체 노인집단 중 대부분은 생애주기 동안 소득 및 소비 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윤석명 외, 2019).

‘65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 하에서는 동일한 대우를 받는 노인이라 하더라도 생애 경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각기 다른 노후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나 현 노인 세대와 다가올 미래 노인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가 살아온 20세기는 일제강점기를 비롯하여 한국전쟁, 군부독재, 민주화운동, 그리고 IMF까지 역사적 굴곡이 심했던 시기로, 노인집단 내에서도 코호트 구분에 따라 생애 경험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결국 노인집단 내 불평등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단 간의 이질성을 바탕으로 노인집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연령 기준에서 나아가 코호트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적 관점에서 개인이 나이에 따라 불평등이 증가하게 되는 ‘연령효과’와 더불어, 동일한 생애 경험을 하더라도 출생 시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코호트효과’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노인집단 내 불평등 문제의 해결하고 다가올 문제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현재 노인의 소득과 자산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곧 노년기로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가구경제 상황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들의 출생 시점에 따라 사회경제적 경험이 상이하기 때문에 코호트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IMF 직후인 1999년부터 한국 사회 내 불평등 확산이 심화되었으므로 해당 시점부터 현재까지 약 20년을 5년 주기의 5개 시점³⁾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한다. 둘째, 코호트적 관점에서 노인집단의 이질성을 바탕으로 해방 이전 출생 세대와 해방 이후 출생 세대로 구분하고 노년기 진입을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를 추가한다. 셋째, 소득과 자산에 대한 각 세대별 불평등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불평등에 대한 연령효과와 코

3) 본 연구에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인 해방 전 일제강점기 세대, 해방 후 전쟁 세대, 베이비붐 세대가 겪은 주요 사회·정책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불평등 확산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 주기를 5년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 IMF, 2008년 세계금융위기,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 따른 불평등도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호트효과에 대해 탐색한다.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노인집단 내 소득 및 자산 불평등 개선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평등 수준 비교를 위한 지표로는 가구소득 및 자산점유율, 10분위분배율, 지니계수, 앳킨슨(Atkinson) 지수를 활용한다.

2. 선행연구

1) 노인과 불평등

(1) 누적불평등과 연령효과

생애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한 개인의 노년기 진입은 노동시장에서의 은퇴 시기와 맞물려 시장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처분가능소득⁴⁾ 중 공적 이전소득의 중요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공적 이전체계가 미미하여 그 수준이 높지 않고, 전통적인 가족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사적 이전체계 역시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현재 노인 빈곤⁵⁾과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급속한 고령화 진행과 복지국가 담론의 확산 등으로 인해 공적 노후보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직접적인 소득이전 영역부터 노인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고용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노후보장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학문적 영역에서는 노인의 소득분포에 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그중에서도 주로 노인빈곤 문제에 주목하여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는데(최옥금, 2007; 최현수·류연규, 2003; 홍백의, 2005), 이같은 접근은 노인이라는 연령집단 자체가 가진 빈곤에 대한 취약성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한계가 존재한다.

최근에는 고령화 등으로 노인의 절대적 수가 증가하면서 지금껏 노인의 규범적 전형이라 여겨지던 모습이 붕괴되는 현상이 잇따라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노인집단 내 이질성(Aged heterogeneity)”(Nelson and Dannefer, 1992)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노인빈곤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노인집단 내 불평등에 관한 연구로 연구의 흐름이 전환되었다. 2010년 전후로 노

4) 시장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을 합한 것에 공적이전지출(세금, 공적연금 기여금, 사회보험료)를 제한한 것.

5) 65세 초과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45.7%로 OECD 평균 12.9%보다 훨씬 높다(OECD, 2018).

인집단과 비노인집단 간의 소득불평등 차이에 대한 비교연구(김경아, 2008; 이원진, 2012), 공적연금 수급의 소득불평등 감소효과에 대한 연구(강성호·임병인, 2009; 김경아, 2008) 등과 같이 노인집단 내의 불평등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 코호트 내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누적불평등(Cumulative inequality)에 관한 연구와 맥을 함께 하는데, 누적불평등이란 생애과정 동안 누적된 불평등으로 인하여 코호트 내의 불평등이 노년기로 이행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Merton은 일찍이 이러한 경향성에 대해 매튜 효과(Matthew effect)라 명명하여 개발·연구하였으며(Merton, 1968; 1973), 이후 Dannefer(1987), O'Rand(1996) 등의 학자들이 코호트 내의 불평등 증가 패턴을 설명하기 위해 이 개념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나이듦에 따라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은 비단 누적불평등 뿐만 아니라 연령효과(Age effect)로도 개념화된다. 연령효과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Paglin(1975)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관측하는 연령이 달라짐에 따라 소득분배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윤종인, 2018). 다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되는 현상을 해석할 때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연령효과와 코호트효과(Cohort effect)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40세일 때의 소득분배 지표와 50세일 때의 소득분배지표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이는 연령효과로 해석할 수 있지만 1945년생의 소득분배지표와 1955년생의 소득분배지표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이는 코호트효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윤종인, 2018, p.2).

한국의 경우에도 몇몇 선행연구를 통해 노년기 이행 과정에서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나, 분석 대상을 남성 고령자만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전체 노인으로 확장하여 보기에 한계가 있고(이미진·김미혜·홍백의, 2007), 분석 시점을 10년 내외로 짧게 잡았기 때문에 노년기 이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포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이원진, 2012; Hong and Kim, 2012).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의 3차년도 자료부터 가장 최신자료인 21차년도 자료까지 총 5개 시점을 추출하여, 노년기 이행 과정에서 불평등 양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조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이 존재한다. 또한 분배지표를 활용해 분석한 노인 불평등 추이를 연령효과와 코호트효과로 나누어 해석함에 따라 보다 실증적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2)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

일반적으로 불평등 연구에서는 주로 소득불평등의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해왔는데, 그 이유는 소득불평등이 곧 소비와 경제성장 등의 경제 지표들과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 등과 같이 다른 요소들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Koen Decancq, Marc

Fleurbaey, Erik Schokkaert, 2015). 그러나 노인 코호트의 경우 시점의 차이는 존재하나 대부분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 코호트 내의 누적불평등을 심도 있게 탐색하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 측면 외에도 추가적인 차원의 논의가 요구된다.

경제학자 Piketty는 그의 저서에서 자산 불평등의 문제에 주목하였는데, 경제성장 과정에서 부의 총량은 늘어나지만 이 성장분의 대부분이 상위층에 집중되기 때문에 자산(부)의 불평등은 점점 심화되며 이런 추세가 누적되어 세습 자본주의가 도래하였다는 것이다(Piketty, 2014). 해외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자산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 국내에서는 비교적 최근인 2007년 이후부터 관련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년기에 진입하는 개인은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 시점과 맞물려 실직 혹은 불안정한 종사상 지위로의 이행 등을 경험한다. 따라서 근로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며 상대적으로 노후소득원으로서의 보유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된다.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노년기 불평등 문제는 노인들이 생애 동안 주된 일자리에 근무하며 축적한 자산 또는 부채 수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하였다(반정호, 2008, p.3)

빈곤 및 불평등 연구에서 소득과 자산을 함께 살펴보는 연구 동향은 최근에 와서 증가하였는데, Caner and Wolff(2004)는 PSID(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를 이용한 연구에서 소득 빈곤율과 자산 빈곤율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 활황기에는 소득 기준 빈곤율은 하락하지만 자산 빈곤율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심도(severity)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남상호·권순현(2008)의 연구에 따르면 중고령자 가구에서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산빈곤의 위험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아·강성호(2008)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중고령층의 자산 및 소득불평등을 분해한 결과 자산불평등 수준이 소득불평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기존의 소득분석 방법으로는 중고령가구, 특히 노인가구의 경제상황을 평가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점에서 착안하여 소득 불평등과 함께 자산 불평등의 측면을 연구에 포함하여 노인 코호트 내의 불평등 양상을 보다 심도 깊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2) 현재노인과 미래노인

(1) 코호트효과

Karl Mannheim은 코호트 시각을 대표하는 학자로 세대를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받아 유사한 의식, 문화, 지식을 갖게 되는 출생 코호트'라고 정의하였다(이영라, 이숙중 2017).⁶⁾

6) Kertzer(1983)는 세대 개념의 명료화를 시도하여 사회과학에서 세대 개념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

코호트는 사회인구학적으로 동일한 시간과 특정한 경험을 공유한 집단이며 코호트효과는 동일한 시기에 출생한 집단은 생애주기 속에서 사회·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며 비슷한 기회와 보상 구조, 기억과 체험구조를 갖게 됨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유사성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김순미, 조정진, 2019). 이러한 코호트효과는 특정한 집단에 충격이 집중되었다는 점과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개인은 변화를 경험하지만 각인효과가 지속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허종호 외, 2017; 김수정, 2018).

(2) 한국 노인의 코호트 구분

우리나라의 세대구분의 선행연구는 칼 만하임식 세대구분 개념을 사용한 연구(김혜영, 2004; 황상민·김도환, 2004; 함인희, 2013; 이은희 외, 2015; 강소량·최은영, 2016)가 주를 이루고 있다.

강소량, 최은영(2016)은 해방전후와 6.25전쟁 종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해방전쟁세대로,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치하에서 청년기를 보낸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로 정의하였다. 김혜영(2004)은 산업 발전 단계에 따라 산업화 1세대, 2세대로 구분하였으며, 산업화 1세대는 일제강점기와 전쟁 경험을 가지고 있어 집합주의적 가치관, 물질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산업화 2세대는 유신체제와 새마을운동을 겪어 집합주의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다고 정의하였다.

이은희 외(2015)는 근대화 세대는 일제강점기를 겪은 세대라고 정의하였으며 일제강점기 세대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극심한 빈곤을 겪었고 해방 이후에는 6.25전쟁을 겪으며 학도병과 한국전쟁에 징집된 세대라고 정의하였다. 해방둥이&전쟁세대는 해방 직후와 6.25 전쟁 종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196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중반까지 경제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라고 하였으며 베이비붐 세대는 근대화 발전을 체감하기 시작한 세대라고 정의하였다.

황상민, 김도환(2004)은 어린 시절의 경험은 경험 목록의 가장 하단에 위치하며, 기존의 경험 위에 새로운 경험들이 순차적으로 누적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해방전후복구세대, 근대화세대, 경제부흥기 세대, 민주화세대, 자율화세대, 신인류세대 총 6세대로 구분하였다.

째, 조부모-부모-자녀 세대와 같이 친족계보(kinship descent)에서 동일 항렬에 속하는 사람들, 둘째,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에서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는 출생 코호트(cohort), 셋째, 청소년 세대, 대학생 세대와 같이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life stage)에 있는 사람들, 넷째, 전쟁 전후 세대와 같이 특정 역사적 시기에 생존한 사람들로서 현대 사회과학에서 통용되는 대표적 세대 구분이다(김혜영, 2004, p.10)".

〈표 1〉 선행연구 내의 세대구분 사례

선행연구	세대구분	
강소량, 최은영. (2016)	- 해방전쟁세대(1941~1954년) -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	- 민주화세대/386세대(1964~1972년) - X세대/2차베이비붐세대(1968~1974년)
김혜영. (2004)	- 산업화1세대(1953년 이전 출생) - 산업화 2세대(1954~1961년)	- 민주화세대(1962~1969년) - 정보화세대(1970년 이후)
이은희 외. (2015)	- 근대화세대(1857~1910년) - 강점기세대(1920~1945년) - 해방동이&전쟁세대(1945~1953년) - 베이비붐세대(1955~1963) - 민주화세대(1961~1972년)	- X세대(1971~1976년) - 에코세대(1977년~1987년) - N세대(1988~1994년) - 밀레니엄세대(1995~1997년) - 스마트세대(1998~2010년)
황상민, 김도환. (2004)	- 해방전후복구세대(1925~1934년) - 근대화세대(1940~1949년) - 경제부흥기세대(1950~1959년)	- 민주화세대(386세대)(1960~1969년) - 자율화세대(X세대)(1970~1979년) - 신인류세대(N세대)(1980~1990년)

본 연구에서는 칼 만하임 식 세대 개념을 바탕으로 하며 한국 사회 내 역사적 사건을 기준으로 각 세대를 ‘해방 전 일제강점기 세대(1944년 이전 출생)’, ‘해방 후 전쟁세대(1945~1954년 생)’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생)’로 구분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1900년대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극심하였고 세대 간의 차이가 확연히 발생하였다. 해방 전 일제강점기 세대는 농업사회에서 성장해 1910년부터 1945년 해방되기까지 35년간의 일제강점을 겪은 세대로 6.25 전쟁을 겪는 등 극심한 환경변화를 겪은 세대이다. 해방 후 전쟁 세대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출생하였지만 일제강점과 6.25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환경과 극심한 빈곤에서 성장하였으며, 사회적 혼란기 속 경제활동을 하였다. 1960년 후반부터 1980년 초중반까지 산업 현장에서 한국의 근대화를 이끈 주역이지만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사회보장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한 세대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생)는 소위 샌드위치 세대라고 일컬어지며 이전 세대에 비해 안정된 사회 환경에서 성장하며 대다수가 고등교육에 대한 혜택을 받았다. 이들은 근대화를 경험하기 시작한 세대로 이전세대들에 비해 비교적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은퇴 후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표 2〉 분석대상 세대별 특성

세대	출생년도	특징 및 현황	
해방 전 일제강점기 세대	1944년 이전 세대	인구	약 332만 명(전체 인구의 5.9%) ¹⁾
		교육수준	일제강점과 전쟁 등으로 초등학교 졸업 이하 교육 수준이 가장 많음
		사회경제적 환경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로 성장 과정에서 극심한 환경변화와 절대적 빈곤 속 성장함
해방 후 전쟁 세대	1945~1954년	인구	약 429만 명(전체인구의 8.3%) ¹⁾
		교육수준	전쟁 후 국가 복구 등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으나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 또한 많음
		사회경제적 환경	해방 직후와 6.25 전쟁 전후에 태어난 세대로 빈곤과 사회적 혼란기 속에 성장함.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 초중반 근대화를 이끌었으며 경제활동 시기에 IMF 경제위기를 경험함
베이비 붐 세대	1955~1963년	인구	약 713만 명(전체 인구의 13.8%) ¹⁾
		교육수준	비교적 안정된 사회 환경에 따라 교육에 대한 혜택을 받아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이 나타나며 대학교 이상의 학력이 급증한 세대
		사회경제적 환경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속에서 태어나 성장하였으며 경제 발전으로 인한 근대화를 체감하기 시작한 세대. 단시간에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경험하였으며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시기에 IMF 경제위기를 경험함

자료: 통계청(2020), 한국노동연구원(2013), 2019 고령자통계(2019), 국회입법조사처(2018) 2020.05.01. 재구성.

주: 인구는 2020년 3월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를 조회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KLIPS)로, 분석차수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소득 및 자산자료를 포함하는 3차 년도부터 5년 주기로, 이후 8차, 13차, 18차 그리고 가장 최근 자료인 21차 년도까지 총 5개 차수의 데이터를 사용한다.⁷⁾ 불평등에 관한 지표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해당 자료의 경우 조사 초기인 2003년까지는 2인 이상 도시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시계열 자료를 모두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7)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소득자료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조사되며, 자산자료는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조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자산자료 간의 시점 차이를 고려하여 소득자료는 3차, 8차, 13차, 18차, 21차 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자산자료는 소득 자료의 전년도 시점인 2차, 7차, 12차, 17차, 20차 자료에서 자산자료만 추출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가구소득과 자산 자료분석을 통해 현재 노인과 미래 노인집단의 불평등 추이를 탐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분석대상기간의 자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이 본 연구의 목적에 유일하게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자료를 이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1964년 이전에 출생한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이며, 이들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가구소득 및 자산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구소득 중 소득변수는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소득을 보정 및 산출하기 위해 균등화개인소득⁸⁾ 개념을 활용하여 소득을 환산했다. 소득은 세후 총소득을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는 가처분 소득과 다소 차이가 있다.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서 소득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을 뺀 소득으로 정의되는 데 반해, 세후 총소득은 총소득에서 소득세만 제외한 것이다. 이는 노동패널자료의 특성상 소득조사가 세후 총소득의 개념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⁹⁾ 따라서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기타소득¹⁰⁾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공적이전소득은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소득을 의미하며, 사적 이전소득은 가족 및 친지 그리고 민간단체의 보조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산은 구체적으로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등의 합을 총자산으로 정의하고, 여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으로 정의한다. 자산은 일반적 소득과 자산분포와 두 가지 불평등 분석 중 앳킨슨 지수 분석에만 사용한다.¹¹⁾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3차, 8차, 13차, 18차, 21차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응답자 중 최종 연구대상은 8,156명이다. 연구대상을 각 코호트 집단별로 구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교육수준, 종사상지위, 거주지역, 주거형태를 설정하여 빈도분석 하였다. 해당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8) 균등화 개인소득 = $\frac{\text{가구소득}}{\sqrt{\text{가구원수}}}$

9)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조사가 7차부터 이루어져 본 연구에서는 세후총소득 개념을 사용하였다.

10) 기타 소득은 퇴직금, 보험금 등을 포함해 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소득이 포함된다.

11) 본 연구에 불평등 지수에 사용된 순자산은 지니계수로 나타내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순자산은 0과 마이너스 값을 취할 수 있어 평균을 중심으로 정규분포를 형성하기 보다는 상위계층에 많은 부분이 편중되어 있어 순자산은 Atkinson 지수 분석에만 사용하도록 한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¹²⁾

(단위: %, 만원)

구분		전체 (n=8,156)	해방 전 일제강점기 세대 (n=2,770)	해방 후 전쟁세대 (n=2,397)	베이비붐 세대 (n=2,989)
성별	남성	48.8	47.7	48.9	49.8
	여성	51.2	52.3	51.1	50.2
교육수준	무학	9.5	24.5	3.4	0.5
	초졸 이하	26.2	38.1	30.7	11.6
	중졸 이상	19.8	15.2	24.2	20.5
	고졸 이상	29.5	14.2	28.6	44.3
고용상태	대졸 이상	15.0	8.0	13.1	23.1
	상용직	28.9	8.1	21.7	38.4
	임시직	14.5	19.5	17.1	11.8
	일용직	11.5	10.6	11.8	11.6
거주지역	고용주/ 자영업자	36.0	51.7	38.8	30.3
	무급가족종사자	9.1	10.1	10.6	8.0
거주형태	대도시	65.7	59.2	65.5	71.8
	비대도시	34.3	40.8	34.5	28.2
가구소득	자가	71.6	72.1	75.9	67.6
	비자가	28.4	27.9	24.1	32.4
순자산	평균	2216.9	1390.2	2369.7	2764.6
	중위값	1783.7	930.9	1931.8	2354.8
순자산	평균	14422.5	16046.4	16594.2	10627
	중위값	2918.5	3250.8	4014.5	1490.1

자료: 한국노동패널 가구 및 개인 정보 재구성(3차~21차)

주: 가구소득 및 순자산은 전체 차수를 평균하여 삽입한 값임. 각 항목에 대한 전반적 추이는 [그림 1], [그림 2]를 참고.

표본의 성별 비율은 해방 전 일제강점기 세대(이하 '일제강점기 세대')의 경우 남성 48.8%, 여성 51.9%이며, 해방 후 전쟁세대(이하 '해방전쟁 세대')의 경우 남성 48.9%, 여성 51.1%,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남성 49.8%, 여성 50.2%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코호트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일제강점기 세대의 경우 교육수준이 초졸 이하인 경우가 62.6%를 차지한 것에 반해 해방전쟁 세대의 경우 34.1%,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12.1%로 나타났다. 반면 고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이수한 경우는 일제강점기 세대가 22.2%, 해방전쟁 세대가 41.7%, 베이비붐 세대가 67.4%로, 세대가 거듭될수록 교육수준이 상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종사상지위는 일제강점기 세대의 경우 고용주/자영업자가 5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12)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동 패널의 21차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가구소득 및 순자산은 조사차수 전체(3차, 8차, 13차, 18차, 21차) 평균 및 중위값의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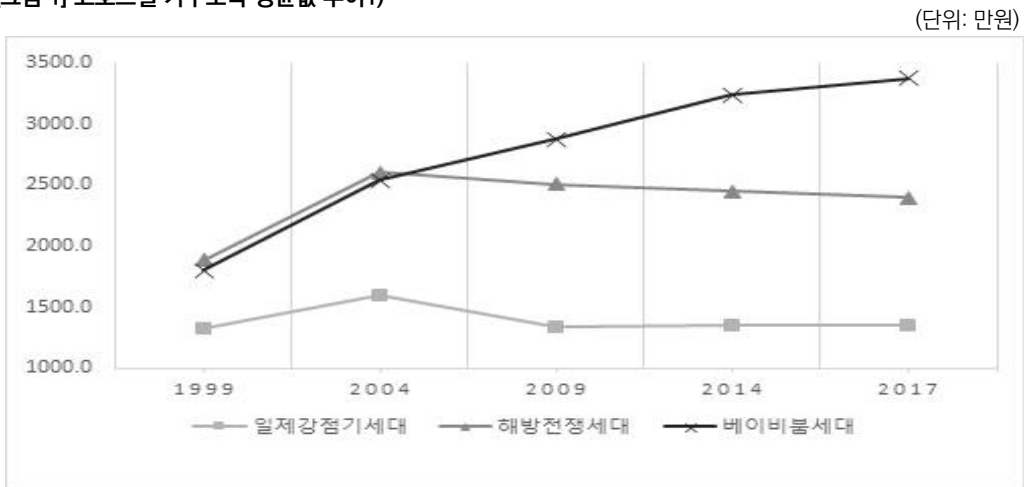
하였으며 임시직이 19.5%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해방전쟁 세대 역시 고용주/자영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그 비중이 38.8%로 일제강점기 세대에 비해 감소한 경향을 보였으며, 상용직이 21.7%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상용직이 38.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용주/자영업자가 30.3%로 나타나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거주지역은 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시 및 도를 ‘대도시’, 그 외 지역을 ‘비대도시’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거주지역의 경우 세대를 거듭할수록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졌는데 일제강점기 세대의 경우 59.2%, 해방전쟁 세대의 경우 65.5%,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71.8%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가 자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67.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으며, 이는 일제강점기 세대와 해방전쟁 세대의 경우에 비해 각각 4.5%p, 8.3%p 낮은 수치이다.

균등화 가구소득(이하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평균 2216.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일제강점기 세대는 1390.2만원, 해방전쟁 세대는 2369.7만원, 베이비붐 세대는 2764.6만원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순자산의 중위값은 2918.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일제강점기 세대는 3250.8만원, 해방전쟁 세대는 4014.5만원, 베이비붐 세대는 1490.1만원으로 나타나며 가구소득과 달리 연령이 증가할수록 순자산이 증가가 나타났다.

다음 [그림 1]과 [그림 2]은 코호트 별 가구소득 및 순자산 추이 결과이며, 먼저 코호트별 가구소득 평균값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1].

[그림 1] 코호트별 가구소득 평균값 추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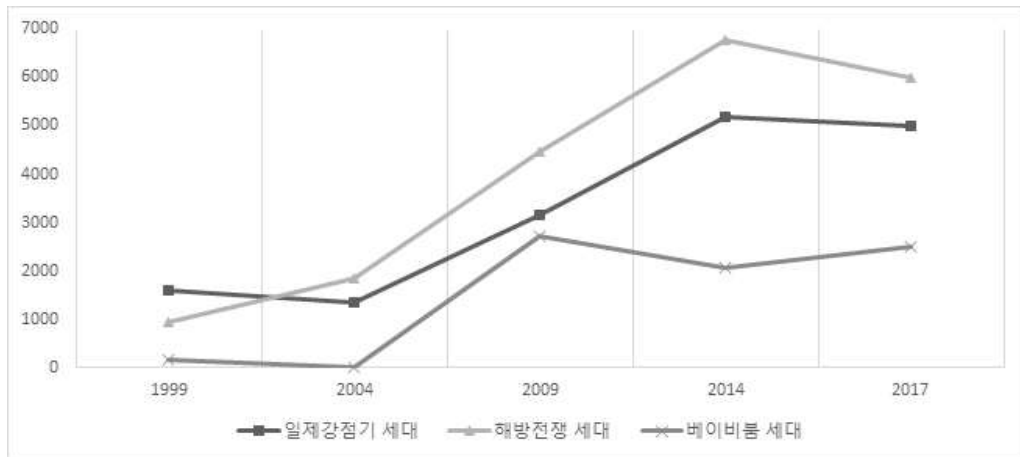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 가구 및 개인 정보 재구성(3차~21차)

세 코호트 중 베이비붐 세대와 해방전쟁 세대는 1999년에서 2004년 사이 시점에서 가구소득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다. 하지만 2004년을 기점으로 베이비붐 세대는 지속적으로 가구소득이 상승한 반면, 해방전쟁 세대는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또한 일제강점기 세대 또는 2004년을 기점으로 동일하게 가구소득의 하락을 보였다. 이는 베이비붐 이후 세대가 노동시장 은퇴와 저숙련 일자리 등의 영향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코호트별 순자산 중위값 추이를 [그림 2]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코호트별 순자산 중위값 추이1)

(단위: 만원)



자료: 한국노동패널 가구 및 개인 정보 재구성(3차~21차)

주: 순자산은 자산규모별 양극화가 매우 심하여 가구소득과 달리 중위값을 통해 산출하였다.

가구소득과 다르게 베이비붐 세대의 순자산 규모는 이전 세대에 비해 가장 낮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까지 순자산 추이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일제강점기 및 해방전쟁 세대와 다르게 2009년을 기점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순자산 규모는 크게 하락했으며, 그 규모 또한 이전 세대에 비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상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 봉양과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본인들의 노후를 충실하게 대비하지 못한 결과 자산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가구소득 및 순자산 추이를 살펴본 결과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 세대의 경우 자산 축적과 소득 측면의 문제를 보였는데, 이러한 점은 특히 중고령자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들의 노후보장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분석방법

(1) 분위별 점유율 및 10분위분배율

먼저 본연구의 대상을 중심으로 분석 가구의 일반적 특징과 경제 전반에 대해 분석을 수행한다. 먼저 10분위 배율을 통해 저소득(1~4분위), 중간(5~8분위), 고소득(9~10분위) 소득과 자산의 점유비율과 조사 차수별 점유비율 변화에 대해 조망한다. 10분위분배율은 그 단순성으로 인해 흔하게 사용되는 기수적 불평등도이며, 아래 산식(1)과 같이 소득계층의 최하위 40%가 차지하는 전체 소득 중의 점유비율을 최상위 20%가 차지하는 점유비율로 나눔으로써 간단히 구할 수 있다. 즉 분자에 적용되는 최하위 40% 계층의 점유율이 커지면 10분위분배율이 커지며, 값이 커질수록 균등한 분배상태를 나타낸다. 한편, 최상위 20% 계층의 점유율이 매우 크고 최하위 40% 계층의 점유율이 매우 작을 경우 10분위분배율은 0에 가까워지며 불균등한 상태의 값을 가지게 된다.

$$(\text{불균등}) 0 \leq 10\text{분위분배율} \leq 2 (\text{균등}) \quad (1)$$

10분위분배율의 측정은 간단하면서도 소득분배 정책의 주된 대상인 하위 40% 계층의 분배상태를 직접 나타낼 수 있으며, 또 이를 상위 계층의 분배상태와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니계수와 반대로 그 값이 클수록 더욱 평등한 분배상태를 뜻한다.

(2) 지니계수 및 앳킨슨 지수(Atkinson Index)

다음으로 소득 불평등 산출이 용이한 지니계수와, 앳킨슨 지수를 활용하여 소득과 자산 불평등도를 측정한다. 지니계수의 경우 중앙값(median) 근처의 불평등도 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앳킨슨 지수는 소득분포 하위계층 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두 지표를 나란히 분석할 경우 지표 간 상호보완을 통해 소득과 자산 불평등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지니계수는 불평등도의 측정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지표로써 소득의 분배 및 빈곤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불평등 측정에 사용된다. 이 계수는 Lorenz 곡선과 절대적 평등선 간 차이의 비율로 계산된다. 지니계수는 아래 산식 (2)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Gini = 1 - \sum_{i=1}^n (y_i + y_{i+1})(n_{i+1} - n) \quad (2)$$

지니계수 값은 로렌츠 곡선의 45도 선 아래의 면적으로 표현된다. 지니계수는 0에서 1의 값을 가지는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커지는 것으로 해석한다.

둘째로, 앳킨슨 지수는(Atkinson Index, 1970) ‘균등분배대등소득’(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 level of income)을 개념으로 한다. 가령 모든 사람에게 소득을 균등분배 했을 때 현재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만큼의 동일한 사회후생을 가져 올 수 있는 총 소득의 평균을 의미한다. 즉, 균등분배소득이 현재 사회의 총소득의 평균과 같다면 그 사회는 완전히 평등한 사회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통상 우리 사회는 분배의 불평등이 존재해 완전한 평등을 의미하는 균등분배소득보다 우리 사회의 실제 전체 구성원의 평균소득이 더 높을 것이다. 즉 균등분배에 따른 소득과 현재소득 간의 차이를 통해 불평등을 판단한다. 따라서 소득분배가 불평등할수록 지수 값은 커지게 된다. 이처럼 앳킨슨 지수(Atkinson, 1970)는 사회후생에 관한 규범적 판단을 명시적으로 포괄하는 불평등 지수중 하나로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A = 1 - \left(\frac{y_\epsilon}{\mu}\right) \quad (3)$$

위의 산식 (3)에서 균등분배대등소득을 나타내는 y_ϵ 가 평균소득을 의미하는 μ 에 근접할수록 평등에 근접한 사회로 가정할 수 있다.

$$\begin{aligned} A_\epsilon(y_1, \dots, y_N) &= 1 - \frac{1}{\mu} \left(\frac{1}{N} \sum_{i=1}^N y_i^{1-\epsilon}\right)^{\frac{1}{1-\epsilon}} \quad \text{for } \epsilon \in (0,1) \cup (1, +\infty) \quad (4) \\ &= 1 - \frac{1}{\mu} (\prod_{i=1}^N y_i)^{1/N} \quad \text{for } \epsilon = 1 \end{aligned}$$

다음 산식 (4)에서 나타난 파라미터 ϵ 는 사회구성원들이 불평등을 혐오하는 정도를 나타낸 값으로 이 값이 클수록 구성원들이 불평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파라미터 ϵ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에 대해 관심도가 적고, 불평등 해결을 위한 복지증진 보다는 경제효율성이 중심이 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4. 연구결과

각 조사 시점의 사회적 맥락은 코호트 집단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작용한다. 동일한 경제 위

기를 겪었다 하더라도, 어떤 코호트는 생애주기 상 소득의 정점에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코호트는 은퇴를 막 시작했을 수도 있다. 즉, 금융위기로 인해 모든 코호트가 소득과 자산 불평등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영향을 받는 패턴이 각 코호트 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1) 분위별 점유율 및 10분위분배율

(1) 분위별 점유율: 가구소득 및 순자산

〈표 4〉 분위별 가구소득 및 순자산 점유율

(단위: %)

			1999	2004	2009	2014	2017	증감여부 ¹⁾
가구소득	일제강점기 세대	1~4분위	13.79	14.64	12.63	13.03	15.04	증가
		5~8분위	39.07	35.21	38.68	36.07	36.31	감소
		9~10분위	47.14	50.15	48.70	50.91	48.64	증가
	해방전쟁 세대	1~4분위	18.35	17.82	17.12	16.50	16.70	감소
		5~8분위	40.21	39.57	39.80	39.42	39.45	감소
		9~10분위	41.44	42.61	43.08	44.08	43.85	증가
	베이비붐 세대	1~4분위	19.89	19.45	19.87	20.34	20.85	증가
		5~8분위	39.65	38.67	39.89	40.40	40.93	증가
		9~10분위	40.46	41.88	40.25	39.26	38.22	감소
순자산	일제강점기 세대	1~4분위	2.59	3.73	2.74	2.49	2.98	증가
		5~8분위	20.37	17.06	17.40	19.61	20.05	감소
		9~10분위	77.04	79.21	79.86	77.89	76.97	감소
	해방전쟁 세대	1~4분위	3.05	4.04	7.82	4.40	6.98	증가
		5~8분위	20.77	22.12	20.26	26.37	26.44	증가
		9~10분위	76.18	73.84	71.92	69.24	66.59	감소
	베이비붐 세대	1~4분위	5.81	2.91	8.01	6.50	6.40	증가
		5~8분위	24.07	20.03	19.43	25.14	27.46	증가
		9~10분위	70.12	77.07	72.56	68.36	66.15	감소

자료: 한국노동패널의 가구 및 개인 데이터(3차~21차), 재구성
 주: 1999년 대비 2017년 가구소득 및 순자산 증감여부

먼저 일제강점기 세대의 가구소득 및 순자산 점유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소득 점유율의 경우 이들이 중년기였던 1999년과 비교하였을 때, 노인 세대로 접어든 2017년 시점의 5-8분위 점유율은 감소하였고, 1-4분위 및 9-10분위 점유율은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두 번의 경제위기 이후 전체적인 변화 양상은, 경제위기가 있었던 2004년과 2014년 모두 5-8분위의 점유율 감소폭이 다른 세대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반면 1-4분위와 9-10분위의 점유율은 증가했는데, 이는 경제위기 직후 중간계층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양극화의 동태적 과정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일제강점기 세대의 순자산 점유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제강점기 세대의 경우 1-4분위 점유율과 비교하였을 때 9-10분위의 점유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 일제강

점기 세대 내의 자산분배가 가장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5-8분위 자산 점유율은 IMF 직후 감소한 반면, 1-4분위 및 9-10분위 점유율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이후 5-8분위의 점유율이 다시 증가하여 2017년에는 1999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두 번째로, 해방전쟁 세대의 가구소득 및 순자산 점유율 형태 중 가구소득 점유율의 경우, 1999년과 2017년의 값을 비교하였을 때 소득분위 중 9-10분위만 유일하게 시간 흐름에 따라 점유율이 증가하였고 1-4분위, 5-8분위는 감소하였다. 경제위기 이후 두 시점에서 소득 추이와 유사하게 9-10분위의 점유율을 증가한 반면 8분위 이하 분위 점유율은 감소함을 나타냈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의 가구소득 및 자산 점유율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 집단 중 비교적 젊은 연령에 속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1999년 당시 36~44세로 본격적으로 근로활동을 이어나갔으며, 최근 은퇴 이후 노인집단으로 진입하고 있는 세대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1-4분위의 가구소득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9-10분위의 점유율은 세 코호트 중 가장 낮게 형성되어 있다. 두 번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9-10분위는 감소하고 8분위 이하의 가구소득의 점유율은 증가했다. 자산점유율의 경우 이전 IMF 직후 9-10분위 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8분위 이하 점유율은 크게 하락했다. 단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 9-10분위의 점유율이 세 코호트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5-8분위의 점유율은 크게 증가했다. 다만 세 코호트 중 1-4분위의 저소득층 비중이 최근에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어 은퇴 후 노후보장 문제가 시급할 것으로 본다.

자산의 경우 공통적으로 세 코호트 모두 8분위 이하에 속한 집단의 자산 점유율이 9-10분위 집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자산 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 10분위분배율: 가구소득

〈표 5〉 10분위분배율

	1999	2004	2009	2014	2017	증감여부
일제강점기 세대	0.29	0.29	0.26	0.26	0.31	증가
해방전쟁 세대	0.44	0.42	0.40	0.37	0.38	감소
베이비붐 세대	0.49	0.46	0.49	0.52	0.55	증가

자료: 한국노동패널의 가구 및 개인 데이터(3차~21차), 재구성

주: 10분위분배율은 가구소득에 의해 산출된 값임.

앞선 가구소득 및 순자산 점유율 측면의 불평등을 직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10분위 분배율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10분위분배율은 하위 소득 40% 가구의 총소득을 상위 소득계층 20%의 총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통상 10분위 결과가 0.45 이상이면 분배

상태가 양호하고, 0.35~0.45 사이는 중간수준, 0.35 미만이면 분배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해석된다.¹³⁾

전체적으로 10분위분배율은 매 조사 차수마다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양호하며, 해방전쟁세대, 일제강점기 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일제강점기 세대의 경우 모든 시점에서의 분배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연령효과로 인한 누적불평등 가설을 뒷받침 할 수 있으나 2014년(기초연금 도입) 이후 분배상태가 다소 개선됨을 보였다. 해방전쟁 세대는 전체 시점에서 일제강점기 세대보다 양호한 분배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1999년 이후부터 분배수준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연령효과로 인한 누적불평등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시점인 2017년의 경우 악화 정도를 나타내는 0.35에 근접하는 0.38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 시점에서 분배상태가 0.45 이상으로 양호하며, 최근 시점으로 올수록 분배수준 또한 지속적으로 양호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선 두 세대와 다르게 연령효과로 인한 누적불평등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분배율이 양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코호트를 동일한 연령 시점으로 두고 비교하였을 때에도 양호한 수준을 보인다. 즉, 나이들에서 나타나는 연령효과라기 보다는 베이비붐 코호트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가령 각 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기 이전 연령인 50대의 분배율을 비교하였을 때 베이비붐 세대가 51-59세였던 2014년의 분배율은 0.52인 데에 반해 비슷한 연령에 해방전쟁세대 2004년(50-59세)의 분배율은 0.42로 나타났으며 일제강점기 세대의 1999년(55세 이상)의 분배율은 0.29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일한 연령대의 비교에서도 상대적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 세대에 비해 양호한 분배 정도를 나타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10분위분배율의 악화가 단순히 연령의 특성이 아닌 코호트 간의 성격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2) 불평등지표: 지니계수와 앳킨슨 지수

(1)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13) KDI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 참조(검색일: 2020년 7월 13일)

<https://eiec.kdi.re.kr/material/conceptList.do?depth01=00002000010000100009&idx=143>

〈표 6〉 각 코호트별 지니계수: 가구소득

	1999	2004	2009	2014	2017
일제강점기 세대	0.448 (-)	0.479 (6.93) ^{주1)}	0.554 (15.65)	0.579 (4.42)	0.588 (1.51)
해방전쟁 세대	0.360 (-)	0.370 (2.83)	0.398 (7.44)	0.428 (7.62)	0.431 (0.57)
베이비붐 세대	0.340 (-)	0.356 (4.86)	0.338 (-5.10)	0.327 (-3.26)	0.317 (-3.09)

자료: 한국노동패널의 가구 및 개인 데이터(3차~21차), 재구성
 주: 이전 차수 대비 증감률(%)

① 세대 내 비교: 연령효과

〈표 6〉는 코호트별 지니계수 값 및 증가율에 대한 결과로 먼저 가구소득 지니계수 추이를 코호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9년에서 2017년 베이비붐 세대는 0.340에서 0.317로 감소하였고 해방전쟁세대는 0.360에서 0.431로 일제강점기 세대는 0.448에서 0.588로 증가해 베이비붐 세대를 제외한 현재 노인집단의 불평등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세대와 해방전쟁 세대의 지니계수는 1999년 이후 계속 증가하였고 2014년 기초연금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생애적 관점에서 노년기 진입과 노동시장 은퇴를 통한 누적불평등 현상이 일부 관찰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는 2004년 이후부터 지니계수가 점차 감소해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은퇴시점에 근접하고, 노년기에 진입할수록 오히려 불평등도의 개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전 차수 대비 지니계수 증감율을 살펴보면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일제강점기 세대와 해방전쟁세대의 지니계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제강점기 세대의 경우 2004년에서 경제위기가 온 2009년 지니계수는 15.65% 증가하였다가 2014년에서 2017년 1.51%까지 감소하여 변화폭이 크게 나타났다. 해방전쟁세대의 경우 2009년에서 2014년 7.62%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4년에서 2017년 0.57%까지 감소하였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1999년에서 2004년 4.86%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9년 -5.10%으로 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② 세대 간 비교: 코호트효과

전체 코호트의 전년대비 지니계수 증감률은 경제위기 이후 1999년에서 2004년 증가했으며, 이후 유일하게 베이비붐 세대는 감소하여 다른 세대와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일제강점기 세대의 지니계수는 다른 세대보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999년 대

비 2017년 지니계수 값의 변화 또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며 세대 중 불평등도가 가장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베이비붐 세대는 다른 세대와 달리 2009년부터 지니계수 값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지니계수 증감률을 통한 코호트 간 비교 결과 일제강점기 세대의 지니계수 증감률이 이들이 노년기로 접어든 2004년과 2009년 사이에 15.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세대들에서의 노년기 진입 시점의 지니계수의 증가율은 노년기 이전과 이후의 지니계수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베이비붐 세대는 오히려 노년기로 진입한 최근 시점에서 불평등도의 감소를 나타냈다.

코호트 특성에 따른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단순히 노년기로의 이행이 불평등도의 증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코호트의 특성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제위기가 각 집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IMF와 2009년 당시 베이비붐 세대는 다른 코호트에 비해 주된 일자리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경제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나마 적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제강점기 세대와 해방전쟁 세대의 경우 은퇴 시기와 맞물린 중장년의 고용, 소득, 사회보장의 불안정의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¹⁴⁾

(2) 앳킨슨 지수(Atkinson Index)

다음의 <표 7>은 앳킨슨 지수를 활용해 소득과 자산 불평등의 추이를 코호트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지니계수와 다르게 앳킨슨 지수는 파라미터 ϵ 값을 통해 평등에 관한 사회적 선호도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값이 높을수록 평등한 사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소득분배의 불평등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ϵ 값을 통해 같은 소득분포의 결과를 가치판단에 따라서 다른 결과 불평등도의 지수 값이 나오도록 할 수 있다. ϵ 값은 0부터 무한대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Atkinson et al.(1995), 현진권·강석훈(1998), 여유진·김태완(2006), 김재호·정주연(2012)의 연구를 토대로 0.5와 1로 나누어 분석한다.

14) 반정호(2012)의 연구결과 베이비붐 세대는 외환위기 이후 경상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이전 세대에 비해 경상소득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2011년 베이비붐 세대의 가구소득은 1996년 대비 2.38배 증가했으며, 베이비붐 이전 세대는 1.58배, 베이비붐 이후 세대는 2.22배로 당시 베이비붐 세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상소득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조사시점에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 은퇴가 본격화 되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표 7) 가구소득 및 순자산의 코호트별 앳킨슨 지수 추이

	코호트 구분	1999	2004	2009	2014	2017	1999	2004	2009	2014	2017
		(ε=0.5)					(ε=1.0)				
가구 소득	일제강점기 세대	0.189	0.201	0.306	0.321	0.330	0.335	0.339	0.395	0.429	0.434
	해방전쟁 세대	0.124	0.119	0.146	0.171	0.169	0.201	0.215	0.245	0.287	0.294
	베이비붐 세대	0.109	0.112	0.102	0.093	0.088	0.179	0.200	0.180	0.174	0.176
순자 산	일제강점기 세대	0.551	0.599	0.620	0.585	0.578	0.684	0.757	0.684	0.715	0.733
	해방전쟁 세대	0.511	0.531	0.563	0.495	0.578	0.707	0.679	0.687	0.672	0.672
	베이비붐 세대	0.475	0.525	0.564	0.471	0.429	0.653	0.680	0.696	0.654	0.634

자료: 한국노동패널의 가구 및 개인 데이터(3차~21차), 재구성

① 세대 내 비교: 연령효과

생애 동안 누적된 불평등이 각 코호트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앳킨슨 지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각 코호트의 생애주기 중후반기 동안의 불평등 형태와 변화 정도를 탐색하고 이후 세대 간 비교를 통해 코호트효과를 탐색한다.

먼저 가구소득에서는 출생년도가 가장 이른 일제강점기 세대의 경우, ε값에 관계없이 앳킨슨 지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해당 세대에서는 생애동안 소득 불평등이 계속해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ε값이 0.5일 때 1999년 0.189에서 2017년 0.330으로 약 0.141 증가하였고 ε값이 1일 때 1999년 0.335에서 2017년 0.434로 약 0.099 증가하였다. 해방전쟁 세대의 경우 동 기간 앳킨슨 지수가 각각 0.045(ε=0.5), 0.093(ε=1) 증가하여 일제강점기 세대보다는 증가폭이 좁지만 생애 동안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앞선 두 세대와는 달리 연령이 증가함에 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불평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ε값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2004년에 불평등도가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였다.

다음으로 자산 불평등의 경우 총자산에서 부채 부분을 제한 순자산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는데, 세대를 막론하고 순자산에 대한 앳킨슨 지수가 0.5~0.7 수준을 상회하여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더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집단 내 자산불평등 수준이 소득부분에 비해 현저히 높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감소경향성을 보인 소득 측면과는 달리 자산측면의 불평등 정도가 이전세대에 근접했을 뿐만 아니라 경향성 또한 유사한 것으로

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남상호(2011)의 연구와 동일하게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노후대비를 위한 충분한 자산을 축적에 어려움이 있음을 뒷받침 할 수 있다.

불평등 수준에 있어서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던 가구소득 측면과는 달리 자산 측면의 경우 뚜렷한 연령효과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는 가구소득의 경우 정년퇴직 등과 같이 가구원의 연령 증가에 따라 소득 변화가 뚜렷하게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자산의 경우 이로 인한 영향이 다소 미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소득 측면의 경우 일제강점기 세대와 해방전쟁 세대에서 불평등에 대한 정적인 연령효과, 즉 누적적인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반해 베이비붐 세대는 부적인 연령효과를 보여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불평등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자산 측면의 경우 모든 코호트에서 소득 측면보다 지수가 높게 나타나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에 비해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연령 증가에 따른 불평등 증가 혹은 감소 패턴은 발견되지 않아 자산 불평등에 대한 연령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② 세대 간 비교: 코호트효과

외환위기 이후부터 최근까지 가구소득 및 순자산 측면의 앳킨슨 지수 결과는 ϵ 값에 상관없이 매 조사 차수마다 강점기, 해방전쟁, 베이비붐 세대 순으로 불평등도가 높게 나타났다.

먼저 가구소득 측면의 불평등이 가장 높은 일제강점기 세대와 해방전쟁, 베이비붐 세대 간의 결과 값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psilon=0.5$ 일 때 1999년의 일제강점기 세대 값(0.189)과 해방전쟁(0.124), 베이비붐 세대(0.109)의 결과 값 차이가 각각 0.065, 0.08로 나타나 코호트 간 격차가 크지 않았던 반면 최근 2017년의 경우에는 0.14, 0.258로 격차가 매우 심화되었다. 5개의 조사차수 중 특히 일제강점기 세대는 2004년과 2009년 사이의 결과 값이 가장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강점기세대가 2009년 65세 이상의 노인집단으로 유입된 후 본격적인 소득 단절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이는 다음 두 가지 결과로도 뒷받침이 가능하다. 먼저, 동기간 순자산 지수의 변화-동기간에 순자산 지수 변화는 크지 않다-를 함께 고려해 보면 일제강점기 세대의 가구소득의 분배 불평등의 급속한 증가는 이 세대에 속한 대다수가 소득단절로 인한 소득평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제강점기 세대와 동일하게 해방전쟁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연령 시점을 두고 앳킨슨 지수 값의 변화를 살펴보면 해방전쟁 세대가 은퇴 시점에 접어들어 2009년도와 2014년도 사이의 소득과 순자산 앳킨슨 지수는 이전과 이후 조사 차수와 비교했을 때 그 차이와 크지 않게 나타났으며 아래 <표 8>을 보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8〉 이전조사 차수 대비 앳킨슨 지수 변화: 가구소득과 순자산

	코호트 구분	1999	2004	2009	2014	2017	1999	2004	2009	2014	2017
		(ε=0.5)					(ε=1.0)				
가구 소득	일제강점기 세대	-	0.012	0.105	0.015	0.009	-	0.004	0.056	0.034	0.005
	해방전쟁 세대	-	-0.005	0.027	0.025	-0.002	-	0.014	0.030	0.042	0.007
	베이비붐 세대	-	0.003	-0.010	-0.009	-0.005	-	0.021	-0.020	-0.006	0.002
순 자산	일제강점기 세대	-	0.048	0.021	-0.035	-0.007	-	0.073	-0.073	0.031	0.018
	해방전쟁 세대	-	0.020	0.032	-0.068	0.083	-	-0.028	0.008	-0.015	0.000
	베이비붐 세대	-	0.050	0.039	-0.093	-0.042	-	0.027	0.016	-0.042	-0.020

자료: 한국노동패널의 가구 및 개인 데이터(3차~21차), 재구성

주: 이전 조사 차수 대비 앳킨슨 지수 값의 증감분

위 〈표 8〉의 2009년과 2014, 2017년은 각각 강점기, 해방전쟁,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로 진입하는 시점이다. 이를 비교해 보면 일제강점기 세대가 유일하게 노년기 진입 시점에서 앳킨슨 지수 값의 변화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와는 상이하게 해방전쟁 및 베이비붐 세대가 각각 노인 세대로 유입되는 2014년과 2017¹⁵⁾년은 이전 및 이후 시점과 지수 값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제강점기 세대가 이후 세대에 비해 공적 노후소득보장이 상당 부분 미흡했으며, 그 결과로 세대 안에서 불평등이 크게 증가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되기 시작한 1999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현 노인 세대와 미래 노인 세대의 불평등 추이에 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조사대상의 분위별 점유율, 10분위분배율을 통해 소득계층별 분배지표를 확인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코호트별 분위 소득점유율 결과 일제강점기 세대는 후기노인으로 접어들면서 중간계층의 가구소득 점유율이 감소하고 상위 및 하위계층의 점유율이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의 일부를 관찰할 수 있었다. 중간계층의 비중이 감소하고 상·하 계층의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누적된 불평등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분위별 자산점유율에서도 일부 설명할 수 있는데, 일제강점기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9-10분위의 자산 점유율이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15) 해방전쟁 세대는 2014년 기준 60-69세로 노인 세대로 진입했으며, 베이비붐 세대는 2017년 56-64세로 일부 노인 세대로 진입을 시작했다.

자산분배가 가장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방전쟁 세대의 경우 1999년 이후 9-10분위 가구소득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 연령증가로 인한 누적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4년을 기점으로 점유율이 감소했는데, 이는 당시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한 정책효과로 보인다.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들과 달리 1-4분위 가구소득에 위치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산 비중은 이전 세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10분위분배율을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세대는 분배율이 0.26~0.31로 지속적으로 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방전쟁 세대는 최근 시점으로 올수록 분배율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분배상태가 양호하였으며, 최근 시점으로 올수록 오히려 분배상태가 더욱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전체 코호트를 동일한 연령 시점에서 비교했을 때에도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10분위 분배율 악화의 특성은 연령효과가 아닌 코호트 간의 성격의 차이로 인한 코호트효과의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지니계수를 활용해 가구소득의 불평등을 탐색하고 연령 및 코호트효과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베이비붐 세대를 제외한 이전 코호트들에서 불평등도가 증가하는 누적불평등 현상이 일부 관찰됐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한국의 노인에게 대한 공적 이전소득 수준이 낮고 이들의 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이행비가 높아 현 노년 세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제강점기 및 해방전쟁 세대의 소득불평등이 악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일제강점기 세대는 노년기 이행 시점에서 가장 높은 소득불평등도 증가를 보였다.

단,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오히려 노년기에 진입할수록 불평등도가 개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는 이전 세대들과 구분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코호트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두 번의 경제위기 동안 비교적 활발히 경제활동을 수행하여 이전 시대에 비해 경제 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반정호, 2012). 또한 자녀에 대한 부양기간이 증가하고 사적 이전소득이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은퇴 연령이 상향 조정되어 결과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불평등 변화 양상이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전개된 것이라 추측된다.

셋째, 앳킨슨 지수를 활용해 가구소득 및 순자산의 불평등도를 탐색하고 연령 및 코호트효과에 대해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 측면에서는 일제강점기 세대와 해방전쟁 세대에서 불평등에 대한 정적인 연령효과, 즉 누적적인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반해 베이비붐 세대는 그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자산 측면에서는 모든 코호트에서 소득 측면보다 불평등 수준이 높게 나타나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에 비해 매우 심각한 것으

로 나타났다.

코호트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기 이전에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 코호트 간의 불평등 정도와 차이는 매우 확연하게 드러났다. 일제강점기 세대는 소득과 자산 측면 모두 해방전쟁세대에 비해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제강점기 세대의 노년기 진입 시점인 2009년 소득 불평등도가 집단 내 그리고 집단 간 비교에서도 매우 크게 증가했다. 반면 해방전쟁 및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집단 간 비교에서는 불평등 지수의 차이를 보이지만 집단 내에서 살펴보면 노년기 이행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불평등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는 은퇴 이후 개인의 인생 여정을 마무리하는 시기로 그 어느 때보다 삶의 질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상당수는 급격한 근로소득 감소와 공적이전소득의 불충분성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에서 보았듯 현 노인집단 내에서도 일제강점기 세대와 해방전쟁 세대의 불평등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고, 곧 노년기 진입을 앞둔 베이비붐 세대의 불평등 양상 역시 이전 세대와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로 진입하기 시작한 현 시점으로부터 10년 후인 2030년 경에는 노인 불평등의 양상이 현재와는 전혀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이러한 코호트 간 차별성을 염두에 두고 맞춤형 소득보장제도를 설계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노인집단을 획일화함과 동시에 이들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 선전과 성급한 제도 도입의 도구로 사용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태도를 지속한다면 점차 심화되는 노인집단 내 이질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나 후기 노인에 특화된 정책이 부재한 상황인데, 일제강점기 세대의 경우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을 포함해 건강 등 다각적 측면에서 다른 세대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결국 가족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정책 개입의 우선순위를 일제강점기 세대에게 둘 필요가 있으며, 머지않아 후기 노인에 진입할 해방전쟁 세대, 그리고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 예방적 성격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 노인집단의 코호트효과에 초점을 둔 만큼, 각 세대가 겪는 상이한 불평등 양상에 따라 이들에게 접근 가능한 정책을 제언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제강점기 세대의 경우, 앞서 분석한 세 코호트 중 소득과 자산 불평등 모두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제강점기 세대는 빈곤 상태에 놓인 인구의 수 역시 절대적으로 많은데, 이 같은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소득보전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 현재 일제강점기 세대는 코호트의 최소 연령이 77세로, 이미 대다수의 일제강점기 세대가 고령노인에서 초고령노인으로 편입한 상태이다. 이들은 신체 능력의 저하 등으로 인해 노동 참여에 의한 근로소득

증가를 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이들 세대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정책보다는 기초연금 등을 비롯한 공적 이전소득의 강화, 그리고 주택연금과 같이 자산을 소득화 하는 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연금의 경우 현재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소득 기준만을 두어 수급액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에 연령 기준을 추가하여 75세 이상 노인에게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¹⁶⁾ 주택연금은 자산을 소득화 하는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중고령 집단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하여 사망 시까지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한국의 경우 노후를 대비한 자산 중 주택을 비롯한 실물자산의 비중이 유난히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¹⁷⁾ 이러한 제도는 부가적인 기여나 조건 충족 없이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김진수·이윤진·김치완, 2015). 따라서 별도의 소득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일제강점기 세대에게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접근한다면 이들의 소득확보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해방전쟁 세대는 연령상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후이지만 근로능력과 근로욕구가 잔존하는 세대로, 노인 노동공급자로서 이들은 주로 노동시장의 주변부, 즉 2차 노동시장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 손지아·박순미(2011)의 연구에 의하면 취업노인의 10년간 평균 일자리 변화 횟수는 4.2번으로 고용 불안정이 심하고 노동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세대에 대한 노동정책은 단순히 노인 취업의 양적 증가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보다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중년 적합직무¹⁸⁾ 정책의 활용을 제안할 수 있다. 현재 해당 정책은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이를 세분화하여 연소노인¹⁹⁾과 고령노인에 대한 지원금을 차등화하고 고령노인에 대한 적합직무를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등의 방법을 고안할 수 있다²⁰⁾.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이들의 기존 경력을 활용 수 있는 일자리를 연계하여 불안정하고 단순한 형태의 노동이 아닌 개인의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16) 허수정·박희란(2018)의 연구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정책적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65세 이상 75세 미만 노인 집단에 비해 75세 이상 노인집단에서 빈곤과 불평등 완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 국토교통부의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가구의 주거 자가점유율은 58%, 자가보유율은 61.2%인 것에 반해 65세 이상 노인의 자가점유율과 자가보유율은 각각 76.9%, 78.8%로, 일반가구보다 약 15~20% 이상 높은 수준을 보였다(국토교통부, 2020).

18) 신중년 적합직무: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정책임. 일정 근로조건을 만족하는 일자리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 40~8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함.

19) Neugarten(1974)은 74세 미만을 연소노인, 75세 이상을 고령노인, 85세 이상을 초고령노인으로 분류한다(전해숙, 강상경, 2012; 이인정, 2017).

20) 해방전쟁 세대(1954~1945년생)는 현재 67~76세로, 연소노인에서 고령노인으로 편입하고 있는 집단이다.

를 창출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를 시작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정년 이후에도 기존의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제도는 대부분 호봉제로 운영되고 있어 은퇴를 앞둔 근로자의 경우 회사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수령하고 있다. 이는 사업주에게 정년 이후에 고용을 계속하는 데에 부담될 수 있는데 임금피크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등 점진적 퇴직(Partial retirement)²¹⁾과 관련한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사업주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은퇴를 앞둔 고령근로자의 소득보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해당 정책의 주된 수혜자인 사업주와 고령근로자 외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기적으로는 고령근로자의 계속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청년 실업 등과 같은 실업, 고용불안의 문제에 대한 대처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한국노동연구원, 2009; 김진수 외, 2015).

아울러 베이비붐 세대는 소득 불평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산 불평등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코호트에 비해 자산의 축적에 어려움이 있는 세대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남상호, 2011), 노년기에 갓 진입하기 시작한 이들 세대가 노후를 적절하게 보내기 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고령자복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등 고령인구를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발표하 바 있다. 그러나 김영욱·김주영(2016)의 연구에 따르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살률이 판자촌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높게 나타나, 단순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을 낙인과 사회적 배제로 꼽았는데, 주거자본을 확보하지 못한 노인에게 물리적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들이 노후를 적절하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정책적 과제일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소득과 자산에 대한 연구 중 자산 연구는 최근 주목받기 시작했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불평등 결과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2010년 주된 일자리 은퇴이후 현재 노인 세대로 진입하기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를 현재 노인 세대와 비교하는 연구는 초기단계로 이들이 사회문화적 배경과 경제적 특성을 분석하

21) 점진적 퇴직이란 사업자가 정년이 넘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생산성에 맞게 줄일 경우 근로자에게 줄어든 소득의 부분을 연금과 실업급여로 근로자의 임금을 일부 보충하는 방법이다(한국노동연구원, 2009).

기에 본 연구의 해석이 다소 정교하지 못하며, 사회문화적인 배경은 다루고 있지 않아 논의 결과에 이들의 특성을 적용해 해석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셋째, 미래 노인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하는 노인집단의 이질성을 바탕으로 한 소득과 자산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거론된 내용을 토대로 현재 노인과 미래 노인 세대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인집단의 불평등에 관한 문제는 새로이 부상하는 이슈가 아니다. 오히려 이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와 한국 경제성장의 어두운 이면인 불평등 문제가 오랜 기간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집단 내 불평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호트적 관점에 입각하여 정책적 실천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불평등은 다양한 원인들이 장기간 축적되어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정책 투입을 통한 중단기적인 가시적 정책효과를 거두기 힘들어(유경준, 2006) 그 자체의 논리와 추진력에 의해 심화되는 '영구기관(perpetuum mobile)'²²⁾으로 묘사되곤 한다(Bauman, 2013). 그러나 코호트적 관점을 통해 노인 대상 정책을 세분화하고 정책적 효율성을 높인다면,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서 탈피하고 오히려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고령 친화적 사회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2) 페르페투움 모빌레(perpetuum mobile)는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끊임없이 작동하는 가상의 영구기관을 뜻한다. 불평등은 자체의 논리와 추진력에 의해 심화되고 그 어떤 외부적 압력과 축적이 필요 없는 '영구기관(perpetuum mobile)'으로 다소 절망적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 참고문헌 ■

- 강성호, 임병인 (2009). 노후소득의 불평등 및 양극화와 공적연금의 개선효과. *사회보장연구*, 25(2), 55-85.
- 강소랑, 최은영 (2016).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 및 이후 세대 간 비교분석: 가계자산, 소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2(2), 1-30.
- 국토교통부 (2020).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 김경아 (2008). 국내 노년층의 빈곤실태와 공적연금의 빈곤완화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산업경제연구*, 21(4), 1503-1523.
- 김경아, 강성호 (2008). 우리나라 중·고령자가구의 자산 및 소득불평등도 분해에 관한 연구. *재정학연구*, 1(3), 21-52.
- 김대일 (2007). 불평등도 지표로서의 소득과 소비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30(3), 77-102.
- 김복순 (2016). 고령층 고용구조 변화와 소득불평등. *노동리뷰*, 65-76
- 김수영, 이강훈 (2009). 이전소득의 독거노인가구 빈곤경감 효과 비교. *한국노년학*, 29(4), 1559-1575.
- 김수정 (2018). 1990년대 이후 코호트 간 소득 격차와 빈곤위험 분석. *비판사회정책*, 59, 69-102.
- 김순미, 조정진 (2019). 노인가구의 코호트별 다차원빈곤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57(1), 51-71.
- 김영욱, 김주영 (2016). 영구임대아파트와 판자촌의 공간구조와 자살률 비교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7(1), 135-146.
- 김진수, 남재욱, 정창률 (2015). 정년연장이 노후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연구. *사회복지정책*, 42(2), 87-111.
- 김진수, 이윤진, 김치완. (2015). 주택연금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31(1), 55-81.
- 김재호, 정주연 (2012).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른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변화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1(1), 421-446.
- 김혜영 (2004). 한국 가족문화의 세대별 특징.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4-47.
- 남상호 (2011).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보유 현황과 시사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115, 1-8.
- 남상호, 권순현 (2008).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과 빈곤 분석: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KReIS)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28(2), 3-32.
- 반정호 (2008).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불평등 구조분석. *노동포커스*, 4.
- 반정호 (2012).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과 가구경제. *노동리뷰*, 18-39.
- 방하남, 강석훈, 신동균, 안중범, 이정우, 권문일 (2009). 점진적 은퇴와 부분연금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배성우, 손지아, 박순미 (2008). 빈곤노인가구의 특성과 빈곤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42(42), 291-317
- 손지아, 박순미 (2011). 취업노인의 특성 연구: 취업상태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20(2), 285-298.
- 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양시현, 최현수 (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 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김태완 (2006). 한국의 소득불평등 동향과 정책방향. *보건사회연구*, 26(1), 95-134.
- 유경준, 김대일 (2003). 소득 분배 국제 비교 와 빈곤 연구. *한국 개발 연구원*.

- 유경준 (2006). 성장과 분배 및 빈곤의 관계 연구. 한국개발연구
- 윤석명, 최기홍, 최세림, 류재린, 배준호, 이정우, 박형준 (2019). 중고령자의 근로여건 변화와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09
- 윤종인 (2018). 우리나라 소득분배의 연령효과와 코호트효과에 대한 연구. 경제학연구, 66(1), 81-114.
- 이영라, 이숙중 (2017).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빈곤 영향 요인 연구: 해방전쟁 세대와 비교 분석.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7. 21-44.
- 이원진 (2012). 노년기로의 이행에 따른 소득불평등 변화와 소득이동성. 한국사회복지학. 64(2). 185-212.
- 이은희, 김경자, 이성림, 유현정, 차경욱, 이영애, 이준영 (2015). 세대별 가계경제구조 비교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1(2). 197-227.
- 이인정 (2017). 연소노인, 고령노인, 초고령노인의 우울 수준 및 우울 관련요인 비교 : 일상적인 근심의 영향에 대한 심리사회적 자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38, 1-23.
- 이준구 (1992)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서울: 다산출판사.
- 전해숙, 강상경 (2012). 연소노인과 고령노인 간 의료서비스 이용 예측요인의 연령차: 고령화 사회의 의료 서비스에 주는 함의. 보건사회연구, 32(1), 28-57.
- 정경희, 강은나, 이윤경, 황남희, 양찬미 (2016).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발전 전략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옥금 (2007).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1). 5-25.
- 최현수, 류연규 (2003).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143-160.
- 통계청 (2019). 2019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http://kostat.go.kr/assist/synap/preview/skin/doc.html?fn=synapview376435_2&rs=/assist/synap/preview.
- 통계청 (2019). 2019 고령자통계.
- 통계청 (2018). 통계로 본 베이비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함인희 (2013). 세대갈등의 현주소와 세대 통합의 전망. 한국정책학회 기획세미나. 2013(1). 47-69.
- 허수경, 박희란 (2018). 기초연금 제도 변화에 따른 빈곤감소 및 소득불평등 정도 완화에 대한 효과성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9(3), 179-200.
- 허종호, 전선영, 오창모, 황종남, 오주환, 조영태 (2017). 출생 코호트 효과와 연령-기간-코호트 분석. 한국역학회지. 39
- 현진권, 강석훈 (1998). 한국 소득분배의 국제비교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D3). 경제학연구, 46(3), 145-167.
- 홍백의 (2005).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4). 275-290.
- 홍석철, 전한경 (2013).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의 심화. 한국경제의 분석. 19(1). 71-122.
- 황상민, 김도환 (2004).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세대의 심리적 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2). 31-47.
- KDI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eiec.kdi.re.kr/material/conceptList.do?depth01=00002000010001000009&idx=143>.
- Atkinson, A. B. Rainwater, L. & Smeeding, T.M. (1995).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evidence from the Luxembourg Income Study*.
- Bauman, Z. (2013). *Does the richness of the few benefit us all?*. Polity.

- Caner, A., & Wolff, E. N. (2004). Asset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1984-99: Evidence from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0*(4), 493-518.
- Dannefer, D. (1987). Aging as intracohort differentiation: Accentuation, the matthew effect, and the life course. *Sociological Forum*, *2*(2), 211-236.
- Henretta, J. C., & Campbell, R. T. (1976). Status attainment and status maintenance: A study of stratification in old a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1*(6), 981-992.
- Hong, B. E., & Kim, H. Y. (2012). Trends of income inequality among the elderly in Korea. *Asian Social Work and Policy Review*, *6*(1), 40-55.
- Decancq, K., Fleurbaey, M., & Schokkaert, E. (2015). Inequality, income, and well-being. In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2*, 67-140. Elsevier.
- Merton, R. K. (1968). The matthew effect in science. *Science*, *159*(3810), 56-63.
- Merton, R. K. (1973). *The Sociology of Science: Theoretic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elson, E. A. & Dannefer, D. (1992). Aged heterogeneity: Fact or fiction? the fate of diversity in gerontological research. *The Gerontologist*, *32*(1), 17.
- O'Rand, A. M. (1996). The precious and the precocious: Understanding cumulative disadvantage and cumulative advantage over the life course. *The Gerontologist*, *36*(2), 230-238.
- O'Rand, A. M. & Henretta, J. C. (1999) *Age and inequality*. Westview Press, Boulder
- OECD. (2018). *Oecd Economic surveys Korea*. OECD
- Paglin, M. (1975). The measurement and trend of inequality: A basic revis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65*(4), 598-609.
- Pedersen, A. W. (2004). The privatization of retirement income? Variation and trends in the income packages of old age pensioner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4*(1), 5-23.
- Piketty, T. (2014). *Capital in the 21st Century*.
- Prus, S. G. (2000). Income inequality as a Canadian cohort ages. *Res. Aging*, *22*(3), 211-237.

Abstract

A Study on the Inequality Trends of Current and Future Elderly: Focusing on Income and Assets by Cohort

Seunghoon Choi* · Subin Min** · Yein Lee***

Based on the criticism of the uniform view of the elderly, this study analyzed the inequality trend of income and assets by dividing the elderly group into three cohorts based on heterogeneity between the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come, assets share, and decile dispersion ratio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1999, the share of the middle class of the pre-liberation and post-liberation birth cohort have decreased. In particular, the decile dispersion ratio of the pre-liberation birth cohort tended to be worse than that of the other cohorts. On the other hand, the baby boom birth cohort showed a favorable dispersion ratio overall, indicating a difference in results between cohorts. Second, as a result of the Gini coefficient, the baby boom birth cohort showed an improvement in inequality as they entered old age, but cumulative inequality was observed in the other cohorts. Especially, the income inequality of the pre-liberation birth cohort was the highest. Third, as a result of Atkinson Index, except for the baby-boom birth cohort,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cumulative inequality due to the age effect. In particular, the level of asset inequality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income inequality in all cohort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aspects and degrees of inequality between elderly cohorts are differen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insists that efforts to design targeted policies for each elderly cohort are needed, and also suggests seeking effective income security policies for the elderly and sustainable elderly welfare policie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the elderly cohort was subdivided to analyze inequality trends and to deriv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groups.

Keywords: inequality of the elderly, elderly cohort, Atkinson index, assets inequality, income inequality

◆ 2020. 7. 15. 접수 / 2020. 8. 19. 1차수정 / 2020. 9. 6. 게재확정

* First author, PhD student,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perlsoup33@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Master student,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sbi1030@yonsei.ac.kr)

***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2019540045@yonsei.ac.kr)